

광주 유통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거세

대형마트 노조 안내 거부·손팻말 시위 “소비자가 나서 일본 제품 찾아주기도”

“아! 이거 일본 제품인데요. 손님들이 나서 일본 제품을 찾아주세요”
지난달부터 NO NO 일본을 선언한 광주 한 식자재 마트 점장의 설명이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단행 한 달, 광주 유통가에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다. 매장 내 제품 철수는 물론 1인 시위·현수막 게시·안내 거부·소비자의 자발적 선택 거부 등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했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식자재마트는

일본의 경제보복 발표 이후 매장에서 맥주와 면류·과자류 등의 일본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어느덧 한 달째 접어들다 보니 이제 손님들이 먼저 일본 제품을 찾아내 직원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매장 관계자는 “취급 제품이 워낙 많아 미처 빼내지 못한 품목들이 있다. 최근에는 손님들이 이를 발견해 알려준다. 확인 뒤 일본 제품이 맞으면 곧바로 제품 철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경제보복 조치가 끝날 때까지 불매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마트 노조도 매장 내 일본 제품 안내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마트 주변 도로와 육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는가 하면 휴식 시간을 이용,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손팻말 시위도 진행 중이다.
일본 대형마트도 일본 제품에 대한 보충 진열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빈자리에 다시 같은 제품을 채워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판매가 급감하는 데다 자칫 마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4만여 종류

의 진열 상품 중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여 종류에 불과하다. 이 또한 음료나 주류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보충 진열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맥주나 음료 판매 실적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 역시 불매운동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의 판매 실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일본 브랜드의 의류나 신발, 화장품 등의 매출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SRF에 빨난 나주혁신도시 학부모 모임 ‘등교거부 투쟁’ 예고

전남도청 앞서 기자회견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등교 거부를 위한 학부모 모임은 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건없는 거버넌스 1차 합의안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학부모 모임은 “오는 7일 열리는 12차 거버넌스에서 ‘1차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거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달 말 2학기 개교시기를 즈음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결을 촉구하는 ‘1차 합의안’은 지난 6월27일 열린 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도출됐다.

환경영향성 조사를 겸한 3개월 시험가동+주민수용성조사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합의안은 SRF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SRF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 전원 합의로 도출됐다.
김현 학부모 모임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소수의 건강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살아야 하는 학부모로서 SRF 시설이 완전 철거될 때까지 등교 거부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향후 10년 韓 ‘폭염 위험도’ 1.8배 증가

향후 10년 내 우리나라의 폭염 위험도가 지금의 2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9곳을 대상으로 한 ‘폭염 위험도 평가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 예상에 따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고,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지난해 폭염 일수는 31.5일이고, 온열 질환자 4526명이 발생해 이중 48명이 숨졌다. 2000년대 평균 폭염 일수인 10.4일의 약 3배고, 2011~2017년 연평균 온열질환자(1132명·사망 11명)보다는 4배에 달한다.
위험도는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4년 발간한 제5차 보고서에 제시한 개념으로, 위해성(hazard)과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기초 지자체 229곳의 폭염 위험도를 기상청의 기후전망 시나리오(RCP 4.5)를 활용해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로 나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는 기준년도인 2001~2010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스스



아이들에게 등록해주는 훈장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1일 오후 충남 논산시 연산면 양지서당에서 훈장님들이 아이들에게 등록을 해주고 있다.

퇴임 조합장에 역대 공로금 지급 ‘논란’...조합원들 반발

퇴임 조합장에게 역대의 공로금을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임원들이 수령하는 등 농협의 예산 집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전남의 한 농협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퇴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1억4000여만원만 지급한데 이어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해당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지난 1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공로금 지급에 반발해 임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조합장이 퇴임할 때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이 농협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전남의 또 다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특별 퇴임공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농협에서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S농협은 전·현직 조합장 등 임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은 고정적으로 ‘시간의 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복지연금과 건강진단비, 업무활동보조비,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 상여금, 창립기념품비, 임직원 피복비 등

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2011년 복리후생비와 관련 상임위원 복리연금 및 비상임 조합장 복리후생비로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재해보조금, 복지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날 행사비나 피복비, 휴가비, 명절 위로금 등은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S농협의 복리후생비 지급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의 고정적인 ‘시간의 근무수당’도 논란의 중심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7개 지점 직원들이 수령한 ‘시간의 수당’은 2017년 2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3억2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3억7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몰카 전력’ 벌금형 사범대생 헌재 “교사 임용 제한 정당하다”

“학생 건강·안전 보호 등 위해 차단 필요”

지하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범대생이 교원 임용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낸 교육공무원법 10조의4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범대생 A씨는 2013년 3월부터 7달 동안 지하철역에서 총 286번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교원 임용 자격이 박탈되자,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교원이 아동·청소년과 상시 접촉해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인성발달 기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자를 교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보다 높다”며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상대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자에 한해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범인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범죄 대상과 벌금형 정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에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용 희망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진 않지만,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자가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호하는 학생 건강·안전, 자유로운 인격 발전 등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법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료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 IN
신뢰한 정보,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제치료, 자립치료, 영인 민력어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